김승환, "개혁의지 후퇴 인상 받아"

"시행령국가로 전락해버린 대한민국을 법치국가 · 헌법국가로 복원시키는 일이 중요"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29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새정부가 출범한 지 갓 20일이 지났을 뿐인데 벌써 관료집단에 휘둘리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 교육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개혁의지가 점점 후퇴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유·초·중·고 교육을 시도교육청에 모두 넘긴다는 핵심사안이 실종되었고 '무상보육 예산 정부책임'도 절반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치는 여전히 국민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권 4년 동안의 교육적폐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채 새 정부에서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정부가 바뀌고 나서 고쳐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면서 "무엇보다도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시행령국가로 전락해버린 대한민국을 법치국가, 헌법국가로 복원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장관 훈령으로 강제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교원 등 연수에 관한 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원평가, 법률상 교육감 권한인 교장공모제 통제, 총액교부원칙을 쪽지교부 원칙으로 바꿔버린 보통교부금, 고용노동부가 행한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처분 등은 헌법적 근거나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하루빨리 폐기 또는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새 정부가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또 국가의 지속적 발전에 결정적인 초석을 놓도록 최대한 협력하겠지만 이런 교육적 폐해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교육감은 비록 반쪽이긴 하지만 정부가 무상보육 어린이집분 2조원 가량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리 전북교육청이 끝까지 무상보육 예산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라고 주장하였기에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라며 "몇 년 동안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정해은 기자

파행으로 시작된 6월 임시국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 백재현 예결특위장 선출

국회가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경기 광명갑)을 선출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예결특위 위원장 선거를 통해 총 투표수 256표 중 234표(득표율 91.41%)를 득표한 백 의원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백 의원은 선출 직후 "국가 살림살이 전반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야하는 예결특위 위원장직에 믿고 맡겨준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헌법이 보장한 재정통제권으로 재정을 심의하고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 일자리를 마련하는 예산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먼저 하고 싶다"며 "국민의 근로권을 보장하고, 경제활력을 줄 수 있도록 국가예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예결특위는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결산(세입세출결산·기금결산)을 심사하는 위원회로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들을 출석시켜 질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뉴시스

여야4당 원내대표, 인사청문 세부 기준 마련키로

전병헌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원천배제… 이전은 투기성 여부 보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9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인사청문 검증 기준 관련해 국회 운영위 소위를 열어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정 의장과 만나 이같이 확정했다고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브리핑했다.

강 의원은 "인사청문회 검증 기준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 소위를 열어 세부 기준을 마련하자고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 원내대표가 운영위 소위를 제안했고 다른당 대표가 공감했다. 다만 '운영위 소위' 부분에서는 여지가 있는 뉘앙스였지만, 논의 착수는 맞다"고 부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병헌 정무수석은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원천배제하겠다고 밝혔다. 2005년 이전 위장전입은 투기성 여부를 보겠다고도 했다.

강 의원은 "전 수석이 와서 보고했다. 전 수석은 인사청문회 관련해 송구스럽다. 인수위워원회 없이 출범하는 것에 대해 양해 부탁한다고 했다"며 "국정공백 최소화 위해 총리지명 서두르는 건 사실이다. 앞으로도 위장전입 관련 사전검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인사 청문회 제도 2005년 도입 이후에 위장전입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고 했다"고도 설명했다. 강 의원은 '2005년 이후 원칙적 배제인 것 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전 수석이 청와대 방침을 국회에 전달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보고한 것이다. 이걸 언론에 공개해도 되냐. 청와대가 공개할 계획이 있냐고 (전 수석에게) 물으니 이 자리가 공개하는 자리다. 언제든지 가서 말해달라고 했다. 한국당도 발표할 것이고 내용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각당이) 의총을 열고 결과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수석간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고민 이해된다. 논문표절도 2007년 이후에 점검안 기준 생긴 거 아니냐. 그 시점과 기준을 만들 필요 있겠다 말했다"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의총 열어서 어떻게 할지 논의하겠다고 했고 자유한국당은 그래도 대통령의 구체적인 향후 입장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대로는 어렵지 않냐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뉴시스

서훈 "국정원 예산, 차장 해도 알기 어려워"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29일 "국정원의 예산은 그 자체를 알기 어렵다. 심지어 차장을 해도 예산 전체를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개혁 목소리가 높다'는 이철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아직 제가 구체적 예산관계 파악은 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정원은 특수활동비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모든 일반 예산을 편성한다"며 "그래서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정원 출신 이철우 정보위원장은 "국정원 예산에 오해가 있다고 하면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금 검찰에서 문제가 되는 특활비와 국정원의 특활비는 이름은 같으나 내용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정원 특활비는 이름은 같지만 실질적 일반 예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정보기관 크기나 예산을 알리지 않기 위해 하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한편 서 후보자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개혁위나 자문위 구성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원외 뿐 아니라 원내 전문가 중 고언을 줄 분들을 모셔서 깊이 있게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국정기획위 "권익위, 국회의원 부패 척결도 힘써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게 기존에 힘쓰던 국민 권익의 구제뿐 아니라 국회의원에 대한 부패 척결에도 비중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가 이날 국민권익위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현재) 권익위는 말 그대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신장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권익의 구제와 부패 척결의 문제가 일견 조화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그러다보니 대한민국에 반부패 컨트롤타워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실제 부패 청산과 반부패 정책의 입안·시행의 문제에 대해 권익위와 심도 깊은 논의가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또 "지난 9년간 한국의 부패 지수는 후퇴를 거듭했다. 이에 대한 깊은 반성과 통찰이 필요하다"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반칙과 특권, 기득권 질서를 해체하고 제대로 청산하는 일이야말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상명령"이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한 · 미 · 일 6자회담 수석대표, 北도발 강력 규탄

북핵 6자회담 한·미·일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29일 긴급 통화를 갖고 강력하게 규탄하며 단호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 측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일본 측 수석대표인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각각 긴급 통화를 갖고 이같이 협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북한이 지난 14일, 21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또다시 도발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요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는 데 공감했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의 무모하고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면서 안보리 차원을 포함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5시39분께 강원도 원산 일대서 동쪽으로 스커드 계열 추정의 탄도미사일 1발을 시험발사했다. 최고고도 120㎞, 비행거리 450㎞로 측정됐다. 북한의 이날 시험발사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단 추진체 성능 시험을 목적으로 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뉴시스